미·중관계의 파동과 영향

이 영 길(한국국방연구원)

◁ 목 차 ▷

Ⅰ. 서 론
Ⅱ. 미중관계의 배경과 과정
Ⅲ. 미중관계의 전략적 요소
Ⅳ. 미중관계의 역동적 양상
Ⅴ. 대한반도 영향과 과제
Ⅵ. 결 론

Ⅰ. 서 론

미국 대통령 경선 기간중 부시 후보가 중국에 대하여 '전략적 동반자'가 아닌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함으로써, 부시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의 새로운 중국정책 및 그에 따른 새로운 미중관계의 동향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실상, 그동안 미중관계는 거의 미국의 세계 및 지역 전략을 겨냥한 대중정책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으며, 따라서 미중관계는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쌍무관계로서 그것의 변화 여하는 아시아 안보의 관건적 요소로 작용해 왔다.

특히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조건에 의한 역동적 미중 '양극체제'가 형성됨으로써, 그 역학구조가 동아시아 대륙의 중국 지배와 해양의 미국 지배로 특징지워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미중관계는 역동적인 한반도 정세 및 남북한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국 부시 행정부하에서의 대중정책 및 미중관계 동

향에 대한 분석을 통한 한반도 정세 및 남북한 관계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나아가 관련 문제인식 및 대응방향 모색에 기여하기 위하여, 먼저 (1)미중관계의 배경 및 과정에 대한 개관 그리고 (2)미중관계의 전략적 요소 분석 등에 기초한 (3)미중관계의 역동적 양상을 전망한 다음, (4)그것이 남북한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 및 과제를 도출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순으로 전개될 것이다.

Ⅱ. 미중관계의 배경과 과정

미국 역대 행정부하에서의 미중관계는 '파란-곡절'의 형태를 반복하였다. 정권수립 직후 20년 동안 중국은 미국의 적으로 정의되었으며, 중국 역시 미국을 최대의 적으로 규정하였다. 1970-80년대 미국은 당면 공동위협의 대처라는 전략적 고려에 입각함으로써 중국을 '비동맹 우호국가'로 정의하였다. 탈냉전 이후 소련 해체와 함께 미중 양국이 공동의 적을 상실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정의는 '모호성(模糊性)'을 띠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미국에게 '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非敵非友)', '적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亦敵亦友)', 그리고 '적과 친구의 중간(介於敵友之間)' 국가 혹은 '협력적 상대', '잠재적 적수' 등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되기 시작하였다.[1)]

특히 클린턴 집권 8년 동안 미중관계의 역정은 보다 현저한 우여곡절을 경험하였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중정책은 국제정세의 변화 및 미국이 직면한 도전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인식 및 동기 등이 반영됨으로써 조정을 거듭하였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중정책은 '접촉'을 통한 미중관계의 기본적 안정 유지와 중국에 대한 철저한 '견제', 즉 '접촉-견제'의 교차 병용으로서, 이른바 (1)'화평연변(和平演變, peace evolution)', (2)'포괄적 접촉', (3)'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一中一台)', 그리고 (4)'전략적 동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미중관계는 대체로 (1)'소극적 안정', (2)'제한적 위기',

1) 傅夢孜, "面向新世紀的中美關係:競爭与合作中求双贏," 『現代國際關係』, 2000年 第1-2期, pp. 91~94.

(3)'적극적 화해' 등의 단계를 경험하였다.

1. 소극적 '안정'

클린턴 행정부 출범 초기 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고려는 미국의 주도적 지위 유지 및 미국 지위에 대한 도전 억제를 통한 정치적, 경제적 및 안보적 이익 보장에 기초하였다. 클린턴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통하여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시위하였는 바, 여기에는 (1)지역내 상당한 규모의 군대주둔 유지 의지의 표명, (2)탈냉전 시기 국제위협의 불확실성 및 국력의 변화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본 및 호주 등과의 동맹관계 강화, (3)접근이 요구되는 군사적 우발사태에 즈음하여 개입이란 정치적 상징 및 실질적인 군사적 배치를 제공하는 군대 파견에 관한 일부 동남아 국가들과의 합의 달성, (4)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관심을 표명하는 징표로서의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대처, 그리고 (5)북한에 의하여 가해지고 있는 새로운 성격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 책무 담당 및 군사적 조정 안배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어떠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조정도 당면 지역정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로부터 시작되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도전은 역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복잡한 관계였다.[2)]

경선기간 동안 클린턴은 이미 전임 부시 대통령이 중국에 대하여 과도하게 연약하였다고 비난함으로써, 사실상 보다 강경한 대중정책이 예고되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출범 직후 중국의 무역관행, 인권문제, 무기판매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구실로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현저한 그리고 유효한 수법은 '최혜국대우'와 '인권문제'와의 연계였다. 1993년 클린턴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연장 문제에는 "중국의 인권상황 개선 및 민주주의 존중"이라는 조건이 부가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 해 5월 클린턴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1년 연장을 발표하면서 중국이 다시 1년을

2) Avery Goldstein, "U.S. Policy Toward China: Try for the Best, Prepare for the Worst",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Apr. 13, 2001; http://taiwansecurity.org/IS/2001/FRPR-041301.htm, p. 1.

더 연장 받기 위해서는 중국이 인권상황 개선에서 전면적 그리고 중대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클린턴 행정부가 중국에 대하여 보다 강경한 인권공세를 전개하고 인권을 무역과 연계시킴으로써 미중관계는 불투명한 국면으로 함몰되었다.

1993년 여름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조건부 연장하기로 한 클린턴의 결정에 이어 이른바 '은하호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미중관계는 보다 심각한 국면에 직면하였다. 이 사건은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와 관련 양국간 유효한 채널 및 대화의 결여가 주요 원인이었다. 당시는 마침 미국이 엄격한 비확산정책 추진을 착수하던 시기였다.

이후 미국의 조야는 중국에 대하여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미국 무부는 중국이 MTCR의 규정을 위반하고 파키스탄에 M-11 탄도미사일 기술을 제공하였다고 비난하면서 미국 국내법에 의거 중국 및 파키스탄에 대한 경제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어 미하원은 중국의 '인권문제'를 구실로 2000년 북경 올림픽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무역역조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클린턴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정책으로 말미암아 미중관계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하에서도, 중국은 정치적 안정 속에서 경제적 성장을 거듭하고 국제적 위상이 제고됨으로써, 미국내에서는 '인권'에 집착한 대중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및 비판의 목소리가 일기 시작하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마침내 미중관계의 경색이 여하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중국의 위상 및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냉전시기보다 더욱 중요성을 더해감으로써 탈냉전 이후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적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미 대중정책을 수정한 서구 및 일본에게 거대한 중국시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현실에 기초한 대중정책의 전환을 검토함으로써 중국과의 '포괄적 접촉'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1993년 11월 장쩌민(江澤民) 주석이 시애틀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함으로써 클린턴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이는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최초의 양국 정상

회담으로 기록되었다. 정상회담에서 쌍방은 미중관계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미중관계가 쌍무적 및 세계적 차원에서 구축되어야 하며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미중 정상회담은 상호 이해증진은 물론 관계개선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1994년 5월 클린턴은 결국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무조건 연장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최혜국대우와 인권문제의 분리는 대중정책 조정의 또 다른 중대한 조치로 해석되었다. 미국 재무장관, 국무장관, 상무장관 그리고 국방장관 등이 중국을 차례로 방문하였으며, 특히 10월 중순 페리 국방장관의 방중은 천안문사태 이후 최초로 중국을 방문한 국방장관으로 기록되었다. 페리의 방중은 양국 군사교류의 회복을 의미하였다. 한편 그 해 중국측에서 부총리급 관리들이 미국을 방문하였으며, 11월 중순 장쩌민 주석이 APEC 정상회담 참석을 계기로 클린턴과 제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장쩌민 주석은 양국간의 건설적 관계정립의 필요성 및 평화공존 5항원칙의 중요성을 지적하였으며, 클린턴 대통령은 이에 동감을 표시하는 한편 양국간의 신뢰구축을 강조하였다. 당시 외국 언론들은 미중 정상회담을 양국관계의 새로운 장으로 평가하였다.

미중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클린턴 행정부는 대만에 대하여 보다 융통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이 대만과의 비공식 관계에 대한 일부 조정 내용을 비준함으로써 미국 정부와 대만 당국의 보다 고위급 접촉을 포함한 고위 경제관료들의 상호 방문이 허용되었으며, 대만 고위관리들의 방미는 불허하되 필요시 그들의 국경통과가 허용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대만의 유엔가입을 제외한 보다 광범한 국제조직 활동의 참여를 지지하였다. 또한 대만의 대미 지위 및 관계 격상이 암시된 가운데 그 해 12월 미국 교통부장관이 미국 각료로서는 외교관계 단절 후 최초로 대만을 공식 방문하였다. 대만과의 관계 조정 의도가 농후한 미국의 조치들은 이후 미중갈등의 '불씨'가 되었다.

2. 제한적 '위기'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둘러싼 미중간의 공방이 격화되고 미국과 대

만과의 관계에서 중대한 변화가 감지됨으로써 미중관계의 심각한 퇴보가 예고된 가운데, 이른바 '중국위협론'은 미국의 전략적 사고에 일대 변화를 초래하였다.

당시 '중국위협론'은 실제로 중국이 인접국들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기 보다는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위협 여부 및 그 정도를 둘러싼 '논쟁', 즉 부상하는 중국이 미국의 안전과 지역의 안정 및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는 주장 이상의 이론적 논쟁에 불과하였으나, 이러한 논쟁들은 특히 (1)거대한 국토와 인구를 가진 중국은 급속한 경제적 및 군사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으며, (2)이러한 변화들은 중국연구 분야가 다양한 이유로 보다 광범한 일반적 이론 및 분석틀이 중국 행태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개념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시점에 발생하였으며, 그리고 (3)이러한 동향들은 세계정치 및 국가행위의 이해를 위한 많은 분석틀이 경험적 및 이론적 수준에서 묘사되거나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하였다는 3가지의 주요 경향들의 교접에 의하여 특징 지워진 역사적인 특정 시기를 조건으로 하여 만연됨으로써 그것은 설득력을 얻기에 충분하였다. 즉 당분간 여하한 여타 국가도 유사한 조건을 공유하지 못할 것으로 인식되면서, 따라서 만연된 불확실성-유도적 불안으로 말미암아 '중국위협' 논쟁은 증폭되기 시작하였다.[3]

이러한 상황하에서 중국에 대한 여타 견제조치들의 효과가 미흡한 가운데 미국은 '대만카드'에 집착하기 시작하였다. 1995년 5월 미국무부는 리등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의 비공식 방미 허용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미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6월로 예정된 츠하오티엔(遲浩田) 국방부장의 방미계획을 무기 연기하였으며, 위전우(于振武) 공군사령원의 방미활동을 즉각 중단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비확산에 관한 양국 전문가회의의 무기 연기 및 주미대사의 소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미중관계는 1979년 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이어 1996년 3월 이른바 '대만화'를 의미하는 최초의 직선제 대만총통

3) Amdrew D. Marble, "The PRC at the Dawn of the Twenty-first Century: Why the "China Threat" Debate?," *Issues & Studies* (January/February 2000), pp. 1-18.

선거에 즈음하여 중국이 대만에 대한 의지를 시위하려는 의도가 농후한 대만 주변에서의 미사일 훈련을 단행하고 미국이 중국의 무력시위를 견제하기 위하여 2개 항모전단을 대만해협으로 파견함으로써 '제3차 대해위기'가 촉발되는 등 미중관계는 위기의 정점에 직면하였다.

대만문제를 제외한 여타 중대한 문제들에서도 미중간의 갈등 및 모순은 증폭되었다. 미국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그 해로 6회에 걸쳐 중국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저지하고 무역불균형, 지적재산권, 시장개방 등의 문제에서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였다. 미국 의회는 티베트 독립세력을 지지하는 한편 홍콩문제에 대한 간섭을 시도하였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미국은 "분쟁 당사국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일체의 협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기존의 불개입 입장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미중 쌍방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양국관계의 회복 및 안정화 조치들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은 미중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시적인 자태를 솔선하였는 바, 1996년 5월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무조건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6월에는 대중국 통신위성 판매 금지에 관한 해제 결정을 의회에 통고하였다. 가장 민감한 대만문제와 관련 클린턴 대통령은 장쩌민 주석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1)'2개중국' 반대, (2)대만독립 반대 및 (3)대만의 유엔가입 반대 등에 대하여 확약하였다. 8월 및 9월 외무장관회담을 통하여 미국측은 미중관계 회복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피력하는 한편 미중관계의 기조를 규정한 이른바 '3개공동성명(三個聯合公報)'의 원칙 준수를 공약하였다.

3. 적극적 '화해'

탈냉전 이후 미중관계의 본질적 불확실성이 보다 증폭되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력 및 군사력이 증강되고 있다는 동의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경향의 의미들을 둘러싼 논쟁은 열기를 더하였다. 즉 "예상되는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부상 및 그에 따른 미국의 독점적 지배에 대한 도전 가능성에 대

하여 미국의 시각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관련, 분석가들은 대체로 (1) '접촉(engagement)' 혹은 (2)'봉쇄(containment)'를 지지하는 두 진영으로 나누어지는 경향을 보였다.[4)]

이른바 '접촉'을 지지하는 진영의 분석가들은 "세계는 권력 중심의 다극화 전이가 불가피하며, 따라서 미국의 목표는 중국의 보다 강화된 역할이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른바 '접촉'으로 지칭되는 접근을 지지하면서, 국내사안 관리 및 국제이익 추구에서의 중국의 변화 촉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경제적 '이기화' 및 '국제화'가 중국에 대한 강제로 작용함으로써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미국의 대외정책 목표가 미국의 우세 유지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중국이 대등한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을 방지 혹은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면 갈등 및 경쟁이 미국의 주도 및 이익에 대하여 보다 심각한 도전을 예고한다는 우려가 만연되면서, 이러한 견해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봉쇄'정책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접촉' 지지자들이 모색하는 이른바 중국의 대외정책 및 대내정책에서의 변화가 확증되기 이전까지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장벽의 강화를 통하여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강조하였다.

탈냉전 이후 대중정책이 미국 외교에서 일대 난제로 부각된 가운데, 특히 클린턴 집권 이후 중국과의 접촉 유지를 주장하는 주류파의 의견이 우세를 점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중국에 대한 억제전략은 중대한 실책으로써 호혜관계의 정립에 기초한 정책 선택만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주장하였다.

1996년 5월 이후 미국 정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정책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그들은 미중관계가 미국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따라서 중국에 대한 '접촉'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안정된 그리고 개방되고 번영된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한편 국제체제에 보다 융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

4) Avery Goldstein, *op. cit.*, pp. 2~3.

미국의 대중정책 조정은 새로운 단계의 진입을 의미하였다. 미국은 중국과의 고위층 접촉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 7월 레이크 국가안보보좌관의 방중에 이어, 11월 클리스토프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양국 정상회담이 기약되었다. 마침내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간의 접촉 유지가 회복됨으로써 미중관계의 분위기는 현저히 개선되고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다.

1997년 10월 장쩌민 주석은 미국을 공식 방문하고 클린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중관계의 방향 및 구도에 관하여 깊이 논의함으로써 마침내 '21세기를 지향한 건설적 전략동반관계' 구축에 합의하였다. 이어 1998년 6월 클린턴 대통령의 답방은 미중 외교사의 중대사로 기록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대규모 방문단을 대동하고 중국의 5개 도시를 순방하였으며 북경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쌍무문제는 물론 세계 및 지역 정세를 비롯한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후 양국 고위급 방문 및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쌍무적 문제들은 물론 국제적 문제들에 대한 협력 또한 강화되었다. 미중 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라크 무기사찰, 서남아 핵실험 등 중대한 국제문제에 대하여 적극 협력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당시 장쩌민 주석은 미중 양국이 한반도 안정, 아시아 금융위기 및 서남아 긴장완화 등의 문제에서 협의 및 협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의 중요한 역할 및 협력적 자세를 높이 평가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은 당초 그 해 11월로 예정되어 있던 방중을 5개월 앞당긴 것도 미중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처럼 1997년과 1998년에 걸쳐 10여년 이래 양국 고위층의 상호 방문이 성사되고 심지어 쌍방이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관계 구축에 대한 진력"이란 구호가 등장함으로써 미중관계는 1989년 천안문사태 이래 최상의 국면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1999년 유고주재 중국대사관 피폭 사건에 따른 중국 국내에서의 반미감정 격화로 말미암아 미중관계는 또다시 삼각한 저점으로의 추락이 우려되었다. 이는 그동안 중국 WTO 가입을 놓고 진행되어오던 미중 회담의 최종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미중 쌍방은 10여년간의 부단한 화해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험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미중 쌍방은 신중한 그

리고 적절한 선택을 결정함으로써 일시 중단되었던 회담을 조속히 회복하는 한편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다. 이로써 미중관계는 또다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우발적인 '대사관피폭' 사건이 미중관계에 장기간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소지가 제거되었다. 이듬해 클린턴은 그의 모든 정치적 자원을 동원하여 의회를 상대로 중국에 대한 '영구적 정상무역지위 부여(PNTR)'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함으로써 이전의 미중 합의를 확인하였다.

Ⅲ. 미중관계의 전략적 요소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상대'로 규정함으로써 대중정책의 기조를 정립하였다. 미국 사람들은 '전략적(strategic)'이란 용어에 대하여 중국 사람들과 다르게 이해한다. 중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국가안보의 함의가 직접 내포되지 않는 장기적 및 방향적 의미로 이해하지만, 미국 지도자들의 외교관계 문제에 관한 언급에서 '전략적'이란 용어는 통상 국가안보의 함의를 내포한다.[5]

그들의 이해에 따르면 '전략적 경쟁상대'란 기본적으로 '미국과 세력범위를 쟁탈하는 국가', 즉 그 미래의 행위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지극히 농후한 국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상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강경한 태도' 및 '광범한 대비'를 통하여 그 행위가 미국의 국가이익에 손해를 야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 혹은 '위협'을 언급할 때, 주요 논거는 역시 중국의 경제력 및 군사력 강화,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역내 세력균형의 파괴, 심지어 미국의 지역 역할에 대한 불만 및 지역으로부터의 미국 축출 등의 가능성에 근거할 것이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최근 "미국 군사력의 중심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전향해야 하며 그 주요 착안점의 하나는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지도적' 지위에 대하여 도전할 가능성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바로 이러한 전략적 논거 및 고려에서 출발

5) 張少威, "布什'失言'還是政策轉變?," 『大公報』, 2001. 4. 28.

하였을 것이다.

향후 미국의 대중정책 및 미중관계는 보다 다양한 전략적 요소들로 구성될 것이다. 미중 양국은 세계적 및 지역적 사안 그리고 쌍무적 관계에서 복잡한 의존관계 및 광범한 공동이익을 공유함으로써 '항구적(durable)' 관계가 불가피할 것이다. 대만문제 및 미국 정치행태 등과 같은 '구조적' 요소, 대사관 피폭 및 군용기 충돌 등과 같은 통제할 수 없는 '돌발적' 요소, 그리고 천안문사태 등과 같은 '구조적' 및 '돌발적' 요소들이 혼재되어 발생하는 많은 불리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매우 '취약한(fragile)' 관계가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다.[6] 특히 부시 행정부가 중국을 '전략적 경쟁상대'로 규정함으로써 대중정책과 관련 클린턴 행정부에 대한 비판의 기초 위에서 상당한 조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중관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전략적 현안들은 역시 구조적 요소로서의 대만문제 및 그것과 관련된 미사일방어(MD) 문제일 것이다.

1. 대만문제

1990년대 이후 대만 분리주의 세력의 팽창과 함께 '대만독립'을 천명한 민진당의 천수이삐엔(陳水扁)이 총통으로 당선됨으로써 대만정세 및 양안관계는 50년 이래 최대의 전기를 맞게 되었다. 중국은 이른바 '평화통일 및 1국가 2체제(和平統一,一國兩制)' 정책을 견지하는 한편 대만의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사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양안문제와 관련 오직 평화적 과정을 중시할 뿐이며 중국통일 및 대만독립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7]

중국에게 '조국통일'의 결의는 외세의 침략 및 간섭으로 말미암은 굴욕 및 좌절뿐만 아니라 탈냉전 시기의 새로운 고려들을 반영한다. 여기에는 (1)중국공산당의 정통성 유지 일환으로서의 '민족주의' 고취, (2)중국 주변 '분리주의' 차단, 그리고 (3)미국 '패권주의' 억지 등이 포함된다.[8]

---

6) 林東來, "中美關係脆弱而有韌性," 『聯合早報』, 2001. 5. 28.

7) 吳心伯, "展望:布什政府的對華政策与中美關係," http://china.donga.com/20010412, pp. 2~3.

최근 미-중-대 삼각관계는 '군용기충돌'사건 및 미국의 대대만 군사판매 결정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군용기사건 이전부터 중국은 이미 미국이 미중관계의 대국적 틀을 중시함으로써 대만에 대하여 '오보'를 보내지 말 것과 대만으로 하여금 미국이 '대만독립'을 지지할 것으로 '오판'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수차 촉구하였다. 중국은 '오보'가 바로 미국의 대대만 첨단군비 판매라는 것이다. 그것은 대만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함으로써 이른바 '무력에 의한 통일 거부(以武拒統)'의 노선을 더욱 강화하도록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9]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대만이 요구한 품목 가운데 이지스 구축함을 제외한 모든 것을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총액은 40억불에 달함으로써 10년이래 미국의 대대만 무기판매에서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이지스함 판매를 거부하였으나 최단 기간내 키드급 잠수함 판매로 보상하는 한편 재래식 동력 잠수함 및 대잠항공기 판매를 결정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공격성 무기 판매 불가라는 '금기' 공약이 붕괴되면서 대만은 방어능력이 대폭 강화될 것이다.

대대만 군사판매 문제는 미중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돌출적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군사판매 방식을 통한 대만의 전역미사일방어(TMD) 체계 가입 실현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당연히 그것은 미국이 중국의 대만정책에 대하여 견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미국은 그것을 지역전략의 일환으로 간주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이지스 및 TMD 체계 판매를 부단히 고려할 것이다.

중국에게 더욱 놀라운 사실은 무기판매 결정 직후 부시 대통령이 천명한 '대대만 방위협력'에 관한 언급이었다. 그는 "대만이 대륙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은 대만을 도울 의무가 있으며 "일체의 수단을 다해 대만의 자위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부시의 발언은 미국이 지금까지 덮어두었던 '면사'를 걷어냄으로써 대해전략과 관련 기존의 '모호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으로 비쳐졌다.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엄수할 것이라고 천명해 왔으나, 부시의 발언은 '대만관계법'이 규정한 '예의 주시'라는 한계를

8) Avery Goldstein, *op. cit.*, p. 3.
9) 范海泉, "中美關係的新變化," 『大公報』, 2001. 5. 3.

훨씬 초월하였다. 이는 미국이 대해정책(台海政策) 위에 덮어두었던 '모호성'이란 면사를 걷어내려는 의도로서, 중국이 설정한 한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며 대만에게 보다 넓은 탈출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10]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및 방위협력을 포함한 미국의 대만전략은 자신의 국가이익, 동아전략 그리고 대중정책 등의 고려와 상호 연계되는 추세 및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대만전략의 중심이 대대만 방위협력 및 대양안 균형유지에서 중국을 겨냥한 '적극적' 배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대대만 군사판매에서 나타난 중대 변화로서 중국의 민감한 반응 및 고도의 경계를 수반할 것이다.[11]

2. MD문제

북한 미사일의 위협이 미국 미사일방어(MD) 구상의 주요 구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최근의 MD 계획들이 러시아 혹은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지만 미국의 MD는 그들의 억지능력을 침식함으로써 그들의 안보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미국의 MD 구상에 대하여 견지하는 수사만큼 그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확실한 선택이 없는 실정이다.[12]

미국의 MD 구상은 특히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함으로써 그것을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의 본질적 단면이 중국의 가장 민감한 군사적 자산 및 미국의 가장 역력한 취약성과 직결됨으로써 MD는 향후 장기간 미중관계의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사실상 미국의 MD 구상은 중국에게 복합적인 전략적 도전을 제공할 것이다. MD는 중국의 대대만 압박, 위기시 대미일 분리 및 대미국 억지 능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중국은 MD가 자신의 보복능력을 박탈할 것으로

10) "中美關係憂多於喜," 『聯合早報』, 2001. 5. 1.
11) 朱鋒, "分析:美國對台軍售政策究竟出現了什麼變化," 『環球時報』, 2001. 4. 13.
12) Michale J. Green and Toby F. Dalton, Asian Reaction to U.S. Missile Defense, *NBR Analysis*, vol.11, no.3 (Nvember 2000) p. 31.

우려한다. 중국에게 핵억지력의 보장은 지역이익의 보호를 위한 행동자유의 확보라는 장기목표에 긴요하다. 냉전종식 이후 1991년 걸프전쟁, 1996년 대만위기 및 1999년 NATO의 코소보작전 등 일련의 사건들은 중국의 MD 대처에 긴박성을 더하였다. 압도적인 미국의 재래식 우세하에서 중국은 핵능력을 통한 대미억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미국이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단극적 세력균형 유지에 진력하고 있는 가운데 MD는 또한 중국의 대지역 및 대대만 야망을 위협할 것이다.[13]

즉 중국의 반대는 주로 미국 기술능력에 대한 우려와 그 체계들이 중국의 재래식 탄도미사일 능력 및 보다 원거리를 겨냥한 핵억지력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중국의 관심은 특히 MD가 주로 대만 혹은 대만을 지원할 미군 보호에 치중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증거리 탄도미사일 전력을 상쇄할 가능성에 집중되고 있다.[14]

중국은 미국의 MD 계획이 나아가 (1)세계 전략적 균형 및 안정의 파괴, (2)강대국간 상호 신뢰 및 협력의 저해, (3)국제적 군통군축 과정의 저해 및 새로운 군비경쟁의 유발, (4)국제확산방지기제 기반의 동요 및 미사일 확산의 자극, (5)국제관계에서의 군사적 요소의 제고, 그리고 (6)국제 평화 및 안정의 저해 등 국제안보환경에 일련의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15]

MD 문제에 대한 중국의 지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그 우려들은 미국의 MD 논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MD 체계가 중국의 당면 무기체계들을 완전 제압할 수 있다는 논리와 함께 MD의 진정한 목적이 점증하는 '중국위협' 대처에 있다는 미국의 명시적 시사로 말미암아 중국은 미국을 불신하고 있다.[16]

그러나 만약 미국이 중국의 전략적 위협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위축시키지 않는 가운데 제한적 MD 능력에 의한 이른바 '불량국가'들의 탄도미사일 위협 대처를 도모한다면 이 문제에서의 미중 마찰은 통제될

---

13) *Ibid.*, p. 32.
14) Avery Goldstein, *op. cit.* p. 5.
15) 吳心伯, 前揭書, pp. 3~4.
16) Avery Goldstein, *op. cit.*, pp. 5~6.

수 있을 것이다. 미중 양국은 모두 이 문제와 관련 전략적 대화를 희망하였다. 긍정적 결과는 대화를 통한 타협의 달성으로서, 예를 들면 미국은 오직 제한적 MD체계만을 개발하며 중국은 전략무기의 증강을 자제함으로써 전략적 경쟁의 수위 상승을 방지하는 길이다. 부정적 결과는 미국이 대규모의 MD계획 추진을 결의하고 중국이 불가피하게 반응함으로써 쌍방의 군통, 군축 및 비확산 방면에서의 협력 종식, MD에 대응하기 위한 중러간 새로운 무기체계의 공동 개발, 미중 전략관계의 심각한 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MD 및 TMD는 미중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관건적 요소로 부각될 것이다.[17]

3. 비확산문제

미국은 줄곧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체계의 확산을 자국 안보에 대한 최대의 '비대칭적(asymmetric)' 위협으로 간주해 왔으며 확산문제에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는 한편 각종 대응수단을 강구해 왔다. 따라서 비확산 문제는 당연히 부시 행정부의 군비통제 일정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비확산 문제와 관련 파월 국무장관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제한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부시 행정부의 급선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비확산을 자신의 외교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의 문제를 미중 및 미러 관계에서 최대의 현안으로 취급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2000년 11월 중국은 미국과 탄도미사일 비확산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미국의 PNTR 부여에 대한 보답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비확산 방면에서의 미중 협력은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18] 첫째, 점차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대만 무기판매가 중국으로 하여금 비확산 문제를 미국의 대대만 무기판매와 연계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MD 관련 동향 또한 비확산 문제에서의 중국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7) 吳心伯, 前揭書, pp. 3~4.
18) 上揭書. p. 4.

사실상 중국과 미국은 비확산 문제와 쌍무관계를 상호 연계시키는 정도를 놓고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19] 즉 비확산 문제와 관련 미중간 이견의 근원은 비확산 문제가 국가이익이란 전체 구도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문제가 국가이익의 기타 부문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중국의 인식과 비확산 문제를 기타 문제들과 연관시킬 수 없다는 미국의 인식 사이의 차이에 있다. 또한 중국은 기존의 비확산 메카니즘에 대한 상당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이견들은 모두 비확산 문제에서의 중국의 협력 의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본질적으로 양국 이익의 상호작용 상황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4. 기타 문제

중국의 WTO 가입 및 미국의 PNTR 부여 등에 따라 미중간 무역의 정치화 문제는 대체로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무역 자체의 문제는 부단히 제기될 것이다. 전년도 미국의 대중국 무역역조가 800억불을 초과함으로써 중국은 최초로 일본을 대체하고 최대 대미흑자 국가로 부상하였다. 이는 보호주의를 초래할 수 있으며 2001년 11월로 예정된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공약이행의 문제와 연계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규정 준수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다. 향후 이른바 '인권문제' 또한 미중간 이견을 증폭하고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영역이 될 것이다.

Ⅳ. 미중관계의 역동적 양상

미국의 대중국정책 방향은 중국요소 및 국제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함으로써 미중관계의 전망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이다. 향후 미국의 대중정책 역시 기존의 경향 특히 클린턴 집권 2기의 전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대체로 (1)'포괄적 접촉', (2)'불시적 조정', (3)'전향적

19) Evan S. Medeiros, *US-China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Cooperation: Progress and Prospects*,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2000, pp. 3~4.

접근' 등 3가지의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미국은 포괄적 접촉의 추진과 함께 특히 대중전략의 다양화 및 효율화를 겨냥한 그리고 정세변화에 부응한 수단의 적시적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동시에 다양한 전략적 요소 및 일정의 불확실성에 따른 우여곡절이 예상됨으로써 미국의 정책적 조정은 보다 융통성을 더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미중관계의 양상은 '지리-조건'적 강제에 의한 (1)'구조적 안전' 그리고 그 틀 속에서의 양국간 역동적 상호작용에 의한 (2)'불시적 긴장' 및 (3)'모호적 공존'이란 3가지의 양상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1. 구조적 '안전'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는 민주주의, 상호의존 및 다자체제 등 이른바 '평화 3요소'의 결여로 말미암아 긴장 고조의 우려가 만연되었다. 현실주의자들은 중국의 부상 및 그에 따른 권력이동이 지역 질서의 재편을 둘러싼 열강간의 갈등을 조장할 것으로 그리고 신현실주의자들은 다극체제의 대두 및 그에 따른 세력균형적 평화 관리가 도전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였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지리적' 요소가 '구조적'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함으로써 경쟁은 반드시 긴장, 위기 및 전쟁 등으로 특징지워지지 않는다는 결론과 함께, 세력균형 및 평화조건의 지리적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망하였다.[20] 즉, (1)세계는 단극체제의 지배하에 놓여 있으나 당면 동아시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즉 중국과 미국의 '양극체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2)역내 열강들—러시아 및 일본—이 한 극으로 부상하기 위한 '지리적' 조건이 결여됨으로써 양극체제가 보다 안전할 것이며, (3)미국과 중국은 상호 상대에게 잠재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지리적 자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상호 숙명적 경쟁자로 부상할 것이나, (4)'지리'는 갈등의 주요한 원인들—능력, 관심, 안보 딜레마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역의 안정 및 질서에 기여할 것인바, 특히 동아시아의 균형적 경향, 미중 양국의 '지리-조건'적 이익 그리고

20) Robert S. Ross, "The Geography of the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vol. 23, no.4 (Spring 1999), pp. 81~82.

안보 딜레마에 대한 지리적 요소의 완화작용 등에 의한 미중 양극체제가 보다 안정적이며 훨씬 평화적인 경향을 수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동아시아는 '지리'가 세력전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적시적 균형유지 및 질서창조를 위한 열강의 능력 및 관심을 촉진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지역적 갈등의 상존에도 불구하고 미중관계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전망을 낳고 있다. 이른바 동아시아의 '3대 갈등'은 (1)남사군도에서의 주권분쟁, (2)한반도에서의 충돌위험 및 (3)대만을 둘러싼 미중대립 등으로서, 그중 남사군도 갈등은 그 심각성에서 최저 수준이다. 미국에게 남사군도는 전력투사를 요하는 전략적 및 경제적 가치가 빈약하며 중국은 군사적 추방을 위하여 현상유지에 도전할 능력 및 전략적 관심이 미흡하다. 한편 한반도는 미국이 대륙 군사기지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미국은 기습에 취약한 지상군을 배치하고 있으며 기습 억지를 위하여 핵무기에 의존해 왔다. 북한은 중국에게 완충지대로서 중국이 현상유지에 대한 북한의 도전을 자극할 전략적 관심이 없다. 한반도의 현상유지는 탄력을 유지해 왔다. 한반도는 미국의 세력균형 혹은 해상안보와 관련 주요 요소는 아니다.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긴 해안선을 유지해야 하며, 따라서 미국의 한반도 철수에 따른 대일위협 및 한중협력은 최저 수준에 불과할 것이며, 미국의 안전보장 혹은 세력균형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만문제 역시 양대 세력의 사활적 이익을 수반하지 않는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 및 동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대만 협력 및 대만의 대중국 거부는 미국의 세력균형 혹은 해운이익과 무관하다. 미국은 중국 연안의 '불침항모' 및 새로운 전략적 협력의 장기적 선택을 상실하더라도 중국 연안 해역에 대한 지배 및 봉쇄 유지를 위하여 일본 및 괌의 미군기지와 동남아의 해군시설을 연하는 접근로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중국의 전력투사는 150마일의 확장 효과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1995~96년 위기처럼 이익에 기초한 정책으로부터의 고립적 및 단기적 이탈 혹은 단기적 결과의 수반에도 불구하고 미중 양국은 대만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한반도 및 대만을 둘러싼 미중갈등은 열강 갈등의 전형에 불과하며 냉전 혹은 열전의 현상으로 볼 수 없다. 미중 양국은 고도의 긴장 없이 갈등의 적절한 관리 및 광범한 관계 유지가 가능

할 것이다.[21]

2. 불시적 '긴장'

미중관계의 '구조적 안전성'이란 거시적 기대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수개월 동안 미중관계는 일련의 시련을 맞고 있다. 양국관계에서의 경쟁적 및 대항적 요소들이 강화되면서 당면 양국관계는 일종의 '소극적 안정' 혹은 일시적 악화의 상황을 예고한다.[22]

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미중관계가 위기의 절정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클린턴 행정부 출범 직후 미중관계는 1995년 5월 미국이 리등후이 대만 총통의 비공식 방미를 허가하고 이어 중국이 주미대사를 소환함으로써 그리고 1996년 3월 미국이 2개 항모전단을 대만으로 파견함에 따라 이른바 '제3차대해위기'가 촉발됨으로써 미중관계의 위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만약 역사적 경험이 반복되는 것이라면, "현재 미중간에는 위기의 절정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가?" "부시 행정부가 새로운 그리고 더욱 심각한 미중관계의 위기를 조장 혹은 추구하려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다음의 위기는 무엇인가?" 사실상 현재 미중관계는 확실히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한 가운데 악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일련의 마찰 및 갈등들은 또한 양국관계의 안정적 및 건설적 발전을 지탱할 수 있는 국내 정치적 기반을 잠식하고 있다.[23]

미국 대선공약 제시부터 일련의 사건 발생 이후 상호 응대까지 그리고 최후 정책 암시에 이르기까지, 큰 흐름에서 미중관계는 '오리무중'의 경지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언행이 세련되지 못한 가운데 매우 공세적이며, 중국은 대응이 보다 신중한 가운데 기본적으로 수세적이다. 이러한 상호 공수 및 진퇴는 교차될 수 있으며, 따라서 미중관계는 아직 낙관하기 이르

---

21) *Ibid*, pp. 111~114.
22) 吳心伯, 前揭書, p. 6.
23) 朱鋒, "歷史的經驗告訴我們什麽?," http://military.china.com/zn_cn/critical2/20010526.

다. 당분간 미중관계는 공화당 및 부시 행정부의 보수정책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며 설사 부시 행정부가 난관에 봉착한 나머지 현실적 회귀를 시도하더라도 그것은 상당 기간의 조정 과정이 요구될 것이다. 그리고 클린턴 행정부 출범 당시 중국에 대한 위세에 비하면 작금 부시 행정부의 언행은 아직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24)

국제정세의 다극화 경향 속에서 중국은 전략적 및 경제적 위상이 날로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개혁개방의 지속적 견지 및 장기계획의 축차적 달성 등에 힘입어 국력의 지속적인 증강이 기대된다. 그리고 중국은 지역적 및 세계적 사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상호 의존적 및 견제적 속성이 보다 현저해지는 상황하에서 중국위상에 대한 전략적 정의 및 미중관계의 합리적 설정 문제는 미국에게 계속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3. 모호적 '공존'

미중관계가 세계 및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매우 '복잡한' 쌍무관계로 부각된 가운데, 양국 사이에는 '경쟁적' 요소와 '협력적' 요소들이 병존한다. 그러나 '협력'이 더욱 요구됨으로써, 그것은 향후 양국관계를 주도할 것이다. 양국관계 속에서 직면한 문제, 갈등 및 모순들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건설적인 전략적 동반관계 구축'이란 목표 실현은 아직도 요원하지만, 양국관계는 이미 어떠한 갈등도 감당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일찍이 경험한 1995년 리등후이의 방미 및 1996년 3월 대만해협에서의 대치는 미중간의 '안정' 형태에서 모종의 이변에 불과하였다. 1970년초 이후 미중 양국은 상호 긴요이익의 유지를 허용하는 가운데 여타 문제들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대만정책을 모색하였다. 당시 중국은 대만의 대미 전략적 자산화 거부와 함께 대만의 독립 및 고립을 방지함으로써 대만주권에 대한 국제적 승인을 유지하였다. 미국은 대대만 안보공약을 유지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의 공격 저지를 달성하는 한편 대만에게 보상적 위

24) "中美關係何去何從," 『聯合早報』, 2001. 5. 8.

신 제공에 대한 만족 및 국제정치에서의 비주권적 지위 수용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장기적 공식에 기초하여 양국은 이미 새로운 협력적 관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25]

이후 미국은 '하나의 중국' 지지 및 '대만독립' 반대를 재삼 천명해 왔다. 현재 미국은 대만의 '카드화' 의도가 분명하나 대만해협에서 '중국이 통일되지 않고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지 않는(不統不獨)' 국면의 장기적 유지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가장 부합된다. 따라서 미국이 미중관계를 규정한 '3개성명(三個公報)'을 철저히 위반하거나 대대만 관계 발전을 위하여 대중국 관계를 희생하는 사태는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나아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중시 및 경제적 실리 추구에 진력할 것이다. 점차 확대되는 중국시장은 그만큼 미중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매력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 부시 행정부가 미중관계의 성격을 클린턴이 갈망하였던 '전략적 동반' 관계와 배치되는 '전략적 경쟁' 관계로 규정하고 이후 양국관계에 심각한 긴장을 초래하였던 일련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미중관계가 영구적 적대관계로 돌변하였다는 이른바 이분법적 단언들에 대하여 단연 오류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미중관계는 불가피하게 '협력'과 '경쟁'이 병존하는 관계로서, 당면 딜레마의 파생들은 분명히 기존의 '상호 전략적 의심'을 심화시킬 것이지만 관계의 '저변'이 상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무한한 상호작용의 영역들이 전개될 것이다. 미국에게 대중국 접촉은 미국 행정부의 태도 변화에 의하여 단절될 수 없다. 양국은 그들을 무한한 인적관계로 결속하는 일련의 문화적, 사회적, 교육적, 과학적, 상업적 및 여타 관계를 경험하고 있다. 이른바 '연성력(soft power)'의 가치로 묘사되는 광범한 비정부간 교류는 보다 변화무상한 정부간 관계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역 및 투자는 변화무상한 관계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안보 영역에서도 구체적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들이 무한하다. 양국은 한반도의 안정 및 비핵화,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매우 중요한 전략적 문제들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다. 최근 정찰기사고를 포함한 일련의 사안들과 관련 단기적인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 미래 미중관계는 '협력', '경쟁' 그

25) Robert S. Ross, *op. cit.*, pp. 113~114.

리고 '공존'의 요소들을 동시에 전시할 것이다. 사실상 일련의 사건 여파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중 양국은 이러한 '복잡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한편 보다 광범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진력하였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양국간의 편차가 확대되지 않는 가운데 호전적 및 적대적 관계를 경험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모호 속에서의 공존" 관계 유지가 불가피할 것이다.[26]

Ⅴ. 대한반도 영향과 과제

미국의 대중정책들은 과도한 단순화 도식에서 선택 스펙트럼의 양단을 의미하는 이른바 '접촉' 혹은 '봉쇄' 주장 사이에서 논란이 반복된 가운데 그 주류는 역시 소박한 '접촉'의 주장도 그리고 완고한 '봉쇄'의 도전도 아닌 각각의 논리적 배경을 구비한 설득력에 의하여 결정됨으로써 그 극단의 타개 및 균형이 유지되어 왔다.[27] 미중관계 또한 기본적으로 구조적 및 역동적 '안정성'의 유지, 즉 '우호'와 '경쟁' 양단 사이에서의 역동적 '균형성' 모색이란 속성을 구현해 왔다. 즉 중국과 미국은 '우의'와 '경쟁' 사이의 어떤 곳에 머물고 있으며, 향후 추세는 국제체계의 기본적 변화에 기인할 것이다. 그 추세는 방치될 수 없으며 당연히 관리될 것이다.[28]

그러나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보다 강경한 대중정책 및 그에 따른 여하한 미중관계의 긴장 고조도 지역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현재 '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非敵非友)' 불투명한 미중관계에 기초한 보다 융통성 있는 지역판도가 적이 아니면 친구(非敵卽友)'란 훨씬 삼엄한 이분법적 지역판도로 진화된다면 지역의 안정 및 번영은 불리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29]

---

26) David Shambough, "The Inescapable Ambiguity," http://taiwansecurity.org/News/2001/Asiaweek-042001.htm.
27) Avery Goldstein, *op. cit.*, pp. 2~3.
28) Peter W. Rodman, *Between Friendship and Rivalry: China and America in the 21st Century*, The Nixon Center (Washington, DC, May 1998), pp. 4~5.
29) "亞太外交新格局展望", http://military.china.com/zn_cn/critical2/20010525.

1. '중립' 시험

미중관계의 긴장 고조는 특히 두 강대국들 사이에서 최대한 '중립'을 유지하려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충성도' 시험을 강요할 것이다. 미중 양국의 막강한 전략적 및 경제적 영향력 앞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중립'의 계속 유지가 매우 어려워지거나 부담스러워질 수 있을 것이다.[30]

미국은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지역에 '안보우산'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은 역내 최대 인접열강으로서 지역에 '수출시장'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보다 건설적인 동반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의 지속적인 안정 및 번영에 계속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가치 강요 혹은 규칙 주도를 바라지 않으며, 동시에 미국의 철수 및 그에 따른 중국의 유일 강대국 부상도 바라지 않는다.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지역의 안정 및 번영 세력으로 계속 남기를 염원하지만,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고조되고 있는 미중관계의 긴장 분위기는 이러한 희망들을 점점 상쇄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만연된 탈냉전 체제 속에서 매우 어렵게 적응하고 있으나 미중관계에서의 새로운 변수들은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중립' 지향을 강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현안들이 '미중대결'로 발전되어서는 안된다"는 키신저를 비롯한 미국내 주요 중국문제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만약 미중 양국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다면 아시아 국가들은 양국 사이에서 선택이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31]

한반도 상황과 관련, 미국은 물론 중국 역시 한반도 안보에 적극 기여해 왔다. 사실상 '안정'에 대한 고려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지배해 왔다. 중국의 정책은 '이념'보다 '이익' 및 '현실'에 기초하기 시작하였는 바, 여기에는 미국의 북한정책에 대한 묵시적 및 명시적 협력, 주한미군에 대

30) 曹雲華, "變化中的中美關係:進退維谷的東南亞", 『聯合早報』, 2001. 5. 10; "亞洲國家辛苦應對中美新冷戰", http://military.china.com/20010521/180577.html.

31) 陳有爲, "中美關係:從交往轉向交鋒," 『聯合早報』, 2001. 4. 27.

한 묵인 그리고 통일 이후의 문제까지 망라되었다.[32] 그동안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미국과의 협력을 불투명한 대미관계 그리고 대만문제 및 미일동맹 등에 대한 우려들과 분리 고려해 왔으며 한반도의 평화, 안정 및 비핵화 유지 등에 관하여 공감해 왔다.

중국의 광범한 '실용주의적' 태도는 "북한이 중국의 맹방도 적도 아닌 오직 이웃일 뿐"이라는 최근의 언급에서 잘 반영되었다. 즉 북한과의 우호관계 유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주요 관심은 이념적 우방의 보호를 초월한 한반도 안정의 유지에 집중되었다. 중국의 한국정책 역시 이익에 기초함으로써 보다 긴밀한 대한관계의 발전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 및 '방자한' 평양정권에 대한 유용한 지렛대로 간주되었다. 중국은 신중한 외교를 통하여 대북한 및 대남한 관계에서 '균형' 유지에 성공하였다.

최근 한중관계는 경제교류, 대북전략, 대일인식 등 광범한 공동이익에 기초함으로써 급속히 확대되었다. 역내 여타 미국의 맹방들과 달리 한국은 유일하게 중국 세력의 부상에 대하여 가장 적게 위협을 느끼고 있다. 중국의 국력 증강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중관계의 고조와 때를 같이 하였다. 중국이 북한의 최후 후원자로 남아 있지만 중국의 대북한 군사관계는 1990년대를 거치면서 급속히 축소되었다. 한중 양국은 특히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하에서 상당한 안보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도발 억제 및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긴장완화에 진력해 왔다. 남북한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접촉도 중국에서 이루어졌다. 장기적으로 보다 강력한 중국도 반드시 한국에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주변 열강들의 틈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으로서는 여타 열강들을 상쇄하기에 충분히 강력한 그러나 지배할 만큼 강하지 않는 중국을 환영할 것이다.[33]

그러나 이러한 성향의 중국도 미중관계에서 보다 심각한 변화가 발생한다면 그것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변화가 동북아 세력균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재고가 불가피함으로써 한국의 기대에서

---

32) David M. Lampton and Gregory C. May, *A Big Power Agenda for East Asia: America, China, and Japan*, The Nixon Center, 2000, pp. 16-18.

33) *Ibid.*, pp. 18~19.

멀어질 위험이 있다.

2. '남북' 경색

미국의 원대한 지역전략 및 강경한 대중정책은 '북한변수'를 매개 혹은 '북한위협'론으로 포장됨으로써 남북관계의 경색이 불가피할 것이다. 미국 전략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아시아의 도전들이 '한반도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 한국에서 대미생존전략을 모색함으로써 미국의 지역 및 한반도 영향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 MD계획의 논리적 초점이 '불량국가들', 특히 북한에 집중되어 있는 바, 2000년 6월 남북한 정상회담 및 이후의 상황은 이미 미국의 MD 결정을 복잡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은 지렛대 획득을 위하여 북한의 절대적 후원자로 군림하려 할 것이며,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계획과 관련 대북한 개입의 대가로 중국은 미국의 MD 중단을 요구함으로써, 중국에게 이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MD 구상의 주요 구실을 제공하였다는 논리에서 합리적인 흥정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북한 미사일능력의 박탈과 미국 미사일 방어의 포기를 연계한 흥정의 가능성은 미국의 외교적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34]

부시 행정부는 이미 새로운 대북접근의 원칙으로 철저한 검증과 상호주의를 천명하였다. 그리고 부시 행정부는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하여 매우 복합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부시는 햇볕정책에 대하여 모든 부분에서의 동의를 보내지 않고 있다."[35]

이러한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따른 한미 이견 및 갈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를 그의 남북관계 추진과 연계시킴으로써 그 전망에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남한을 방문하지

---

34) Kurt M. Cambell and Michell B. Reiss, "Korean Changes,Asian Changes and the US Role," *Survival*, vol.43, no.1, Spring 2001, pp. 53~63.

35) 래리닉쉬(Larry Niksch), "美는 北 檢證을 願한다", 『朝鮮日報』, 2001. 7. 4.

못하는 이유가 미국의 대북한 태도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형철 북한 주유엔대표부 대사는 북미간 적대관계가 지속된다면 남북한의 화해에도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남한에 병력을 주둔하고 있고 군사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이 북한에 적대정책을 실시하는 한 남북한 관계도 대결구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경고하였다.[36]

김대중 대통령도 최근 뉴스위크지와의 회견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포함한 향후 남북관계가 "미국이 대북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상당 부분 달려 있으며, 따라서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와 매우 깊이 연계되어 있다"고 실토함으로써, 미국의 대북정책이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한 정상회담 및 이후 쌓아온 대화 및 교류의 성과들을 침식할 가능성을 우려하였다.

한편 미국의 전략문제 전문가들은 "미중 양국이 한반도의 현상유지와 관련 협력의 기초를 모색할 것이나 그것이 중대한 긴장의 징조를 보인다면 영향력을 둘러싼 공개적 경쟁 유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였다."[37] 그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도전으로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중러 양국이 '다극화'의 강화 및 미국 '패권'의 약화를 위하여 공모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중러 양국이 미국의 MD에 반대하기 위한 연합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미국의 역내 위상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들 또한 만약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에 동조할 경우 미-일-한 체제에 대응한 중-러-북 체제라는 냉전적 구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38]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의 협력 및 군사 관계 강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2000년 7월 북경에서 개최된 중러 정상회담을 포함한 최근의 공식회담에서 보듯이 미국의 '단극주의'에 반대하기 위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7월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MD의 성격이 단극주의적 군사 및 안보 이익 추구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이는 러시아, 중국, 그리고 기타 국가들의 국가

---

36) 『東亞日報』, 2001. 5. 21.
37) Kurt M. Cambell and Michell B. Reiss, *op. cit.*, pp. 63~68.
38) 『중앙일보』, 2001. 5. 4.

안보에 대하여 가장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상회담 직전 중국 외교부 사주캉(沙祖康) 군축국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안보위협을 제거 혹은 최소한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 및 수단들을 모색하기 위하여 상담 및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밀접한 관계는 대응조치의 공동 개발 및 중국의 대러 군사장비 구매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39] 최근 북러 사이에 대규모의 '군사거래'설이 나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40] 지난 4월 북한은 소련해체 이후 최초로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을 위시한 군사대표단을 러시아에 파견 러시아와 '방위산업군사장비분야협력협정' 및 '2001년 군사협력협정' 등 2개 협정을 체결하고 전투기, 정보수집체계 등 7,000억원 규모의 무기판매를 요청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41]

미국의 MD 구상을 비롯한 새로운 지역전략이 결과적으로 미-일-한 '남방관계'와 중-러-북 '북방관계'라는 이른바 '편가르기' 및 '줄세우기'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한국의 대북방 및 대북한 입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나아가 한반도 정세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협력' 위축

동북아는 강력한 경제적 보완성 유지 그리고 쌍무적 및 다자적 경제협력을 통한 각국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가 요구되고 있다. 동북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심화는 나아가 유관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당연히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 확대는 또한 이 지역의 안보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다자주의'는 새로운 역사적 시기에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으로 인식됨으로써 지대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42] 즉 다자주의

---

39) Michale J. Green and Toby F. Dalton, Asian Reaction to U.S. Missile Defense, *NBR Analysis*, vol.11 ,no.3, November 2000, pp. 38~41.

40) "俄羅斯出售朝鮮5億美金軍備," http://military.china.com/zh_cn/news2/20010430.

41) 『世界日報』, 2001. 5. 16.

42) 다자주의(multilateralism)란 "셋 혹은 그 이상의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일반화된 행위원칙 (generalized principles of conduct)에 기초하여 조정하는 제도의 유형"을 말

의 발전 및 그것에 대한 중시는 탈냉전 이후 만연된 새로운 안보관념의 요소로 부각되었다. 다자주의는 다자협력을 통한 지역의 평화 및 안정 수호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기간 동안 동북아 지역은 다자주의를 경험하지 못하였으나 냉전종식 이후 동북아 지역의 안보정세가 개선됨에 따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은 이 지역의 다자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진력해 왔으며 상당한 성과도 달성하였다. 한반도 4자회담, APEC, TRACK II 다자안보대화 채널, NEACD 등은 지역 다자주의 발전 및 촉진에 대한 지역 국가들의 원대한 포부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제외한 모든 동북아 국가들은 1989년 창설된 APEC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미 ARF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ARF에 가입하였다.

탈냉전 이후 중국은 지역 다자주의 건설에 대하여 회의 및 관망에서 점차 수용 및 개입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다변외교에 대한 관념 및 행위는 큰 변화를 보였다. 중국은 국제 및 지역 다변외교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그것은 이미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많은 동북아 국가들과 이웃하고 있는 중국은 지역 다자협력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왔다.[43] 중국은 APEC 정상회담에 직접 참가해 왔으며 '상해협력조직(SCO)', ASEM, ARF, 10+3 및 10+1 회의 등 지역 다자활동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 왔다. 금년도 APEC 회의가 상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동북아에서 중국은 일련의 다변외교 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한반도 4자회담 개최 및 평화체제 구축에 대하여 적극 지지해

함. 여기에서 '일반화된 행위원칙'이란 특정상황에서의 전략적 필요 혹은 당사자로서의 특정이해와 무관한 유형의 행동과 어울리는 행위를 규정하는 원칙을 말함. 따라서 다자주의는 다수 국가들이 상호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생성된 사회적 조건으로서의 불가분성(indivisibility) 및 포괄적 호혜성(diffuse reciprocity)이란 2가지의 특성을 지님. 포괄적 호혜성이란 Keohane의 특정 양보에 대한 시간적 및 공간적인 구체적 대응을 요구하는 구체적 호혜성 (specific reciprocity)에 대응되는 개념임. 다자주의는 (1)협력의 촉진 및 (2)안정의 유지 등 2가지의 강점을 발휘함. John G. Ruggie,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46, no.3 (Summer 1992); Robert O. Keohane,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0, no. 1 (Winter 1986) 참조.

43) 張小明, "中國与東北亞地區合作," http://www.china.donga.com/2001041200006.

왔으며 '6자회담' 제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중국은 NEACD의 회원국으로서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이미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지금까지 동북아지역의 다자주의 수준은 상당히 저조함으로써 다자협력의 제도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자주의 발전 전망은 현재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다.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평화, 안정 및 번영과 관련 역내 다자협력 촉진을 위한 유관 국가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특히 미중관계를 포함한 역내 쌍무관계의 긴장은 모두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주의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다.

국제적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럽연합(EU) 및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등과 유사한 아시아 경제공동체 결성 가능성과 관련, 전문가들은 역내 국가간의 경제적 의존 뿐만 아니라 강대국간의 정치적 합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44] 만약 미중관계의 긴장이 고조된다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는 새로운 '편가르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역내 협력은 그만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Ⅵ. 결 론

한반도 주변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중관계의 동향과 관련된 안보환경 및 국제관계의 새로운 양상 속에서, 한국에게 제기되는 문제는 정위(定位) 및 정향(定向)을 포함한 역할 정의에 모아질 것이다.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동아시아는 '지리'가 세력전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균형유지 및 질서창조를 위한 열강들의 능력 및 관심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적 갈등의 상존에도 불구하고 미중관계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전망을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수년간 한반도 주변 전략환경이 극적인 변화를 거듭함으로써, 미소 초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양극체제는 사실상 미중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양극체제' 그리고 러일을 망라한

44) 『東亞日報』, 2001. 5. 24.

'다극체제'로 대체되고 있다.

일찍이 국제체제가 미소 초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양극체제에서 다극화의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학계에서는 국제체제의 '다극화'와 그 '안정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구구한 이론들이 제시되었는 바, 국제체제의 '안정'이란 관점에서 양극체제와 다극체제의 장점들이 합쳐진 그리고 그 단점들이 상쇄된 이른바 '양-다극체제(bi-multi polarity)'가 보다 소망스럽다는 주장들이 지배적이다. 즉 양-다극체제하에서는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경쟁적 및 조화적 측면을 내포함으로써 경쟁관계는 순수한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의 성향이 희박해지며, 다극화가 진행될수록 '동맹'과 '중립'의 차이 또한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이다.[45]

현재 아시아에서 어느 열강도 균형유지를 위한 압도적인 능력 발휘의 전망이 희박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균형도 '다극적' 균형에 의지하게 될 것이다. 다극적 균형은 냉전시대의 양극적 균형과 달리 일방의 승리가 타방의 패배를 의미하지 않음으로써 군사력에서의 대칭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극적 질서체계는 전통적 세력균형보다 군사력의 상당한 불균형과 영향력의 광범한 차이를 허용함으로써 위계구조의 색채가 희박해질 것이다. 세력균형 속에서 국가들의 지역적 우위를 결정하는 영향, 관심 혹은 책임의 범위가 존재할 것이나 '견제-균형'체계에 의하여 패권의 방지가 모색될 것이다. 가장 야심적인 혹은 공격적인 구성원(들)의 시도는 여타 국가들의 공동 노력들에 의한 견제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에서 경제를 포함한 '연성적(soft)' 요소들이 중요성을 더함으로써 세력의 개념은 보다 확대되고 있다.

한편 경제성장에 따른 중급국가들(middle powers)의 존재 및 부상은 열강들의 정치적 위상 제한을 의미한다. 열강들의 게임에서 중급국가들의 정치적 역량은 최소한 패권에 대한 부분적 견제로 작용할 것이다. 동시에

---

45) K. W. Deutch & D. Singer, "Multipolar Power Systems and International Stability," James N. Rosenau ed., *Internatioanl Politcs and Foreign Policy: A Reader in Research and Theory* (New York: Free Press, 1969), pp. 315~324; Richard N. Rosecrance, "Multipolarity and the Future," James N. Rosenau ed. *op. cit.*, pp. 325~335; 金相俊, 國際政治理論 I (서울: 三英社, 1977), pp. 350~367 참조.

중급국가들은 그들의 이익이 열강간의 균형이 유지됨으로써 가장 잘 보장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어느 한 강대국에 의한 지역의 지배에 대하여 위협을 느낄 것이며 상호간의 견제 및 균형 조치들을 그들의 안보 및 자주의 조건으로 간주할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열강의 세력균형 변화에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균형의 유동성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상쇄체제를 모색할 것이다. 사실상 열강간의 온건한 경쟁상황은 역내 국가들에게 최상의 조건을 제공한다. 위험한 열강간의 연합 그리고 첨예한 경쟁 혹은 대립의 가능성에 노출되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훨씬 광범한 행동범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46]

따라서,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한반도 주변에서 만연되고 있는 미중관계의 '불확실한' 상황 및 우려되고 있는 미중관계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역내 역학구조의 필연적인 '다극화' 경향 및 미중관계의 필연적인 '안정화' 속성 등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이른바 '견제-균형' 및 '경쟁-협력'의 구도 속에서 '주체성'과 '융통성'의 조화적 모색이 보다 요구될 것이다.

46) Paul Dibb, *Towards a New Balance of Power in Asia*, IISS, 1995, pp. 6~24.